

EU · 미국, 무역분쟁 사례

최근 유럽연합(EU)의 설탕 보조금, 미국의 면화 보조금, 미국 버드 수정안(Byrd amendment) 등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크고 작은 무역 소송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세계 무역시장의 큰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예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WTO는 2004년 8월 31일 미국이 반덤핑법(anti-dumping law)인 버드 수정안¹⁾ 철폐를 불이행함에 따라 EU와 다른 7개 WTO 회원국이 요구한 양허 승인조치(go-ahead)를 허용한다고 판정했다. 다음은 EU와 미국간의 과거 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1. 해외판매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 FSC)²⁾

해외판매법인 면세는 미국 수출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는 이를 불법적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고, EU에게 미국 상품에 대해 연간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승인해 주었다.

-
- 1) 버드수정안이란 미국 세관이 외국업체로부터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국내 피해 업체들에 재분배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제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 2) 미국 조세법상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면세규정을 말한다. FSC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2000년 2월에 만들어졌다. 바베이도스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소득의 15~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EU는 단계적으로 과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채택해 왔다. EU로 수입되는 모든 미국 상품에 대해 3월 1일부터 5%의 초과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매달 1%씩 관세율을 높였다. 보복관세는 2004년에 3억 1,5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고, 미국 정부가 면세 혜택을 폐지하지 않으면 2005년에는 6억 6,6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2. 유전자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

미국은 유전자변형 식품수입에 대한 유럽이 취한 5년간의 지불유예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WTO에 제소하였다. 미국은 미국 농민들이 유럽의 견고한 무역장벽 때문에 연간 판매액이 3억 달러 정도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EU는 2004년 5월 한 종류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수입을 허가하였지만 미국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3. 바나나 분쟁(Banana Wars)

미국과 유럽은 수 년 동안 유럽의 바나나 수입 제한 조치를 놓고 다투고 있다. 미국은 1999년 Body Shop, Gocci 등 유럽 상품에 대해 1억 9,0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바 있지만 2001년 협상결과 분쟁은 종결되었다.

4. 쇠고기 전쟁(Beef Battle)

유럽은 미국산 성장호르몬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였고, 이에 대해 1999년 7월 미국은 Roquefort 치즈, 벨기에산 초콜릿과 같은 유럽산 기호식품에 1억 1,600만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EU는 미국산 성장호르몬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5.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Anti-Dumping Act)'

WTO는 2004년 2월 EU에게 미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16년 반덤핑법'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 덤핑판매로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피해를 덤핑상품 판매로 제소된 외국 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TO는 EU가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지만 보복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유럽 내 기업이 받은 피해를 증명해야한 한다.

6. 버드 수정안 산정 방식

8월 31일 EU, 일본, 캐나다, 브라질, 인도, 멕시코, 한국, 칠레는 버드 수정안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승인 받았다. WTO는 이미 버드수정안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미국은 이 법이 외국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복관세 허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WTO에 미국이 반덤핑 과세(anti-dumping duties)를 산정하는 관행을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7. 하바나 클럽(Havana Club)³⁾ 혹은 제제 211조

외국 기업들이 쿠바의 승인을 받은 상표권(trademarks)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미국의 입법 조치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특히 프랑스 기업인 Pernod Ricard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자사의 Havana Club 럼주를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료: 로이터 통신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

3) 쿠바정부와 프랑스 기업인 Pernod Ricard사는 합작회사인 Havana Club Holding SA사를 통해 하고 있는 Havana Club 럼사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카스트로 정권이 1960년 동 사업을 몰수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을 말한다.